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김진수 | 발행처: 대한민국제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20('22-10) | 2022. 10. 04.

북한 핵의 고착화와 선제사용 법제화에 대한 대응
박동순

“추모의 벽”과 재향군인회
박순제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방안
홍성표

북한 핵의 고착화와 선제사용 법제화에 대한 대응

박 동 순

(한성대학교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핵 무력 고착화 및 법제화 선언

그동안 국제사회를 속이고 40년 핵 개발에 매달려왔던 북한이 기어이 ‘핵보유국’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핵 공격지침을 담은 법령까지 제정했다. 지난 9월 8일 북한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한 핵 무력의 고착화를 선언했다. 그는 "핵 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미국의 목적은 우리 정권의 붕괴이며, 따라서 절대로 비핵화란 없으며 협상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도 관심이 없음을 표명하여 핵문제의 난관을 예고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핵 무력정책을 법제화 해 놓음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핵 무력정책 법령은 1항부터 11항까지 핵 무력의 사명과 구성,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및 사용 조건 등을 담고 있다.

법령은 핵무기 사용의 절대적 권한을 김정은에게 부여하고, 북한 지도부가 위협에 처할 경우 선제적 핵공격은 물론 사실상 모든 상황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 4월 북한군 창설 90주년 열병식에서 “우리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선제타격 및 보복 기능을 핵 무력의 목적으로 법제화’한 배경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내부적으로 “오늘의 고생을 피하기 위해 적들의 간교한 설교와 끈질긴 압박에 못 이겨 공화국정권과 후대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을 대부로 개선된 경제 생활환경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외부적으로도 “천신만고한대도 우리는 선택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절대로 저들의 기도를 실현할 수 없으며, 인민의 선택을 바꿔놓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지도부는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면서, “핵 무력은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영원한 존엄이라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핵 고착화 및 법제화에 대한 평가와 국제적 반응

북한의 ‘핵 포기 불가’ 선언과 ‘핵의 선제적 사용’을 법제화 했다는 발표는 한반도비핵화 정책에 대해 적지 않은 난관을 예상할 수 있다. 김정은은 법령을 두고 “핵을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 놓았으며,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 된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의 지위로 핵 군축 협상만 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은 핵 고도화의 길을 끊임없이 가면서도 협상의 판을 키우려는 의도에서 초강수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북한은 대화의 개시조건으로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의 변화’는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 온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로 연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군사 훈련의 중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및 확장억제 제공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북한은 핵 무력정책의 법제화를 통해 지금까지 미 본토를 향한 전략핵의 개발에 치중해 왔던 입장에서 주한미군과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의 사용가능성을 한층 구체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는 결국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으며, 만약 한미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채 ‘무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북한은 법령이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북한의 핵 무력 정책의 법제화 발표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주요 국가들의 반응은 이전과 동일하게 ‘외교를 통한 비핵화’를 주문하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비핵화는 없다며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유엔은 브리핑에서 “북한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관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 선언과 관련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핵 무력 법제화를 공개한 데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상황인식과 대응

김정은은 지난 10년 동안 네 번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ICBM) 등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 왔다.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전과 미·중 대결 속에 중국과 러시아의 절대적 비호를 얻은 김정은이 ‘핵개발 고도화의 불가역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한다면 유엔의 제재 및 미국의 독자제재,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요동치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무력 고착화 선언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한미 동맹의 억제력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북한 스스로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이 핵 위협을 중단하고 한국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핵 고착화와 선제 사용의 법제화에 대해 정부는 미국과 확장억제력의 내실화를 꾀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정부들이 답습한 북핵 대응 방식을 넘어 그야말로 ‘담대하고 창의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북한이 핵을 끌어안고 웅크릴수록 정권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주민들의 고통은 커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외교·안보적으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개선하는 등 한·미·일의 군사안보적인 관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30년 이상 외교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안보적으로 밀접해진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서도 장기적 전략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국민의 결집된 노력으로 북핵문제를 결연하게 대처해야 할 때이다.

“추모의 벽”과 재향군인회

박 순 제

(대전 대덕대학교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저는 2017년 5월에 워싱턴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난 관광지 여러 곳을 둘러봤는데,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는 건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이었습니다. 참전 조각 용사들의 헌신에 거수경례로 깊이 화답했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베트남전 참전비 등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전 참전기념 공원에는 당시 참전했던 전사자 명단을 적어 놓은 조형물 하나 없었습니다. 참전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런 조형물 정도는 조용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2차대전, 베트남전 기념 공원에는 참전용사 명단비가 있어 더욱 그랬습니다. 아쉬움을 남기고 귀국했습니다.

5년이 지난 올해, 2022년 7월에, 그 아쉬워 했던 조형물이 반듯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추모의 벽>이라고 명명된 이 조형물은 추모 연못을 중심으로 높이 1m, 둘레 50m인 원형의 화강암 벽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벽에는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전사자 4만 3748명(미군 3만 6574명·카투사 717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추모의 벽>이 준공될 때 까지는 많은 곡절이 있었더군요. 여기에 우리 재향군인회의 노력이 곳곳에 베여있었다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한국전 참전기념 공원에 한국전 참전 전사자 이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0년 당시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KWVMF) 회장을 맡고 있던故 윌리엄 웨버 美 육군 예비역 대령의 제안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의회에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참전용사 명단을 새겨 놓은 조형물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미 의회가 2016년에 추모의 벽 건립법을 상, 하원에서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한국 의회 역시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총사업비는 2420만 달러 (약 300억 원)로 한국 정부의 예산과 우리 국민의 기부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일에 앞장선 건 바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였습니다. 한국전참전용사 추모 재단에서 <추모의 벽>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금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향군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로 건립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뜻있고, 명분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성금이 제대로 걷힐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2018년 9월 10일부터 일부 언론사 등과 함께 성금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향군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1인1달러 모이기 캠페인 등을 벌였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모금에는 90살 참전 노병, 어린 학생, 정부 부처, 국회의원, 주한 대사, 현역 군인, 연예인, 기업체, 미국 참전 용사회 등 많은 분들이 앞장서 성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약 90개 단체, 20여개 기업, 개인 2만 8000여명이 참여, 최초 목표액 보다 6배나 많은 약 7억 원 정도 모아졌다고 합니다.

성금 모금에는 특히 향군의 임직원과 각급회 회원, 해외 지회, 산하업체, 참전 및 친목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각 출신별 동문회, 예비역 전우회 등에서도 적극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억 여원의 성금이 모아진 것은,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재향군인회의 목적에 따라 이뤄진 자발적 참여였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향군은 '추모의 벽 건립 프로젝트'를 적극 홍보해 한국PR협회가 주관하는 한국PR 대상 시상식에서 모범사례로 선정, 국제PR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1일부터 10개월 간 주요 언론사와 함께 향군회원, 그리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펼친 쾌거였습니다.

향군의 이 같은 노력에 따라, 2019년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 2022년까지 '추모의 벽'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280여억 원을 지원하면서, 착공식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드디어 올해 2022년 7월 27일, 6.25전쟁 종전일에 맞춰, <추모의 벽> 준공식이 한-미 주요 인사가 모인 가운데 뜻깊게 거행됐습니다. 신상태 현 향군회장도 그날 현화했습니다.



<추모의 벽>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6.25전쟁에 참가했던 미국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분들은 1950년 당시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 주기 위해 전쟁터로 달려와서 용감히 싸우다 절연히 희생된 분들이고, 이분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준공을 계기로 피로 맺은 한-미간의 혈맹이 더욱 강화돼 우리 국익에도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 벽은 한-미동맹의 영원한 혈맹의 상징물이자, 양국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군은 매년 워싱턴 D.C 참전기념 공원을 찾는 연간 600여만 명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세계 평화와 자유를 지키다 전사한 전쟁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도 알차게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추모의 벽 완성을 목전에 두고 웨버 대령은 올해 2022년 4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린 씨앗은 숭고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에게 다시 한 번 존경의 경례를 붙입니다. 다시 워싱턴을 방문하게 된다면 <추모의 벽>에 새겨진 그들에게 거수경례로 감사함을 전할까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방안

홍 성 표

(아주대학교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으로 국제질서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도 9월 15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 회의를 갖고 중국을 포함한 회원국들과 사태를 논의했다. 이처럼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적응하고자 각국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미중간 전략경쟁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는데, 한국은 과연 이 높은 파고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직면해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시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의 결속력 강화이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뿐만 아니라 향후의 국가명운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방한하여 윤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상호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대통령이 1953년 휴전을 추진하던 미국 지도부를 강력히 설득하여 그 해 10월 1일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한미 양국은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공동으로 방위하고, 이를 위해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며,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이제 군사동맹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그 영역도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현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방위능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동맹으로의 발전을 주요 과제로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윤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정상간 최초로 북한 핵미사일 및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써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위역량을 사용하겠다고 천명했다. 한미간 조율을 통해 미 전략자산의 적기 전개와 필요시 추가조치를 취하겠다는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합의했다.

또한 그동안 중단, 축소된 연합훈련의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우주, 사이버 등 첨단 국방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윤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한의 경제와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담대한 계획을 설명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적극 지지하였다.

한미 정상은 경제안보차원에서는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기술동맹을 강조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시장 충격, 첨단기술경쟁 등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도전인데, 양국의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출범시킴으로써 소통과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금융 안정화를 위한 협의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원자력 기술의 제3국시장 진출을 위해서 원전수출협력각서(MOU) 등 제도적 기반을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방상호조달협정(RDP) 논의도 개시하며, 핵심 첨단기술협력 즉, 인공지능(AI), 우주, 사이버, 바이오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으로 한미 정상은 인권,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며 세계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한다는 등의 동맹의 미래 비전에도 합의했다. 한미 정상은 쿼드와의 협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또 뉴프론티어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해나감에, 가치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 멤버로서 개방, 투명, 포용적인 경제질서구축과 규범 논의도 함께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과 같은 한미정상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미동맹 강화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간 긴밀 대북정책 공조이다. 문정부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명백한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미사일 대신 발사체라는 애매한 표현을 씀으로써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엇박자를 냈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도 마지못해 수용하는 등 동맹국으로서 맥빠지게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또한 세계가 주목하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활동을 부정적으로 폄훼했다. 심지어 유엔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백서를 채택할 때에도 불참해서 국제사회의 빈축을 샀다.

둘째, 인류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공조이다. 인권, 자유, 법치,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이 보장 및 향상될 수 있도록 한미간에 긴밀한 정책 공조를 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인류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이를 유린하는 전체주의국가들로 대결구도를 이루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등 구공산권 국가들이 인류보편적 가치를 목살하는 나라들이다. 미국은 인류보편적 가치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인류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한미 정책 공조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셋째, 국제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긴밀한 정책공조를 해나가야 한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주요 국제분쟁에서는 한 발짝 뒤로 빠지는 국익우선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신뢰를 잃는 소탐대실의 정책행태이다. 물론 우리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긴요하지만, 동맹국이라면 필요시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하면서라도 동맹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프간전쟁과 이라크전을 치루면서 미국은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를 강조하며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한국은 안전만을 고려한 참전으로 일관했다. 물론 참전 명분만으로도 큰 기여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맹국이라면 좀 더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동맹이 소중하다면 그만큼 위험부담도 불가피함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미중 전략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책공조를 해야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인프라 구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대결구도 하에서 문정부가 추구했던 ‘전략적 모호성’은 오히려 양측으로부터 흠대를 당하는 외교참사를 초래했다. 중국을 공식방문한 문대통령의 경호원들이 행사장에서 중국공안원들에게 구타당하고 추방되는 외교참사를 겪었고, 미국도 주한 대사를 1년 이상 공석으로 비워두었다. 윤석열 정부는 해방의 주체이고 전쟁 참화로부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미국과의 동맹국임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외교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한미간에 초당적 차원의 정책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435명의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100명 중 34명, 그리고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현재의 미 상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백중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판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자산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한국정부는 보훈 차원에서 미국의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민간 교회와 단체에서도 이 같은 초치행사가 줄을 잇고 있는데, 이는 미국 민들 사이에서 감사할 줄 아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찬사로 확산되고 있다. 참전용사들이 피흘려 지켜낸 한국이 이처럼 성장, 발전했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이 같은 보훈 외교는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와 국제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일곱째,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미간 연합방위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드기지 정상화, 주한미군기지 반환, 건설한 방위비 분담, 긴밀한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충실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국제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4강 외교는 한국의 입지를 때로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같은 곤경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건설한 방법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충실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본 위에서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제관계의 기본축은 한미동맹이라는 것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